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중단 '논란'

광주시 "생존자 없고 주관 단체 나타나지 않아 올해부터 개최 안해" 시민단체 "공식 논의도 없이 형식적인 전화 한통만으로 결정" 반발

광주시가 올해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의 날' (8월 14일)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없어 행사 개최 당위성이 퇴색했고 관련 시민단체 중 행사를 주관할 단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개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고민할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행사를 3주 정도 앞둔 시점에 관련 시민단체에게 전화 통화만으로 행사 참가 여부나 주관 여부를 물어 미개최를 시민단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주관해 온 기림의 날 행사를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사실을 공개증언한 날(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2017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도 2017년부터 시민사회 단체 등과 같이 행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광주시는 지역 내 유일한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인 곁에 할머니가 2019년 별세함에 따라 생존자가 없어 관심이 떨어졌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쏠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저조해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지역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5곳(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여성단체연합, 광주나비, 광주평화나비네트워크)에 행사참여를 요청했으나 3곳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2곳은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행사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의지 문제를 시민단체에 덮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가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 관련 시민단체들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에도 개별 시민단체에 전화 통화만 하고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기림의 날을 3주 정도 앞둔 지난달 21일 광주지역 역사 시민단체에 연락해 행사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광주시

관계자가 전화를 해 다짜고짜 기림의 날 행사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다"며 "행사에 대한 설명도, 개요도 없이 그저 참석 여부만 묻고 공문을 보낼 테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앞서 시간을 갖고 조연을 구하며 참석 의사를 물었다면 협조했겠지만 형식적인 의사전달만 이뤄졌다. 과연 광주시가 처음부터 기림의 날 행사 개최 의지가 있긴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참여의사가 없었다는 시민단체 중 하나인 광주여성단체연합의 경우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수정 광주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우리 회원들 누구도 광주시에서 기림의 날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게 이유라면 광주시가 더 나은 행사를 기획하려 노력해야 하는데, 기념행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5·18의 도시라는 광주시의 정체성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광주지역 생존자도 없는데다, 정부와 5개 자치구가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까지 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대구를 제외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도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목포 예술인 '대통령상 위조' 본격 수사

목포경찰, 9명 입건 소환조사 위조·거래 주도 브로커 추적

목포지역 예술인들이 돈을 주고 위조된 '대통령상'을 거래해 자신들의 약력을 부풀리는데 썼다는 의혹(7월 18일자 광주일보 6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목포경찰은 전남예총 회원 등 목포지역 예술인 9명을 공문서 위조,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서울의 한 미술대전 주최사로부터 위조된 대통령상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예술인들의 대다수는 서울의 한 미술대전 주최사로부터 택배를 통해 대통령상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 협회로부터 "미술대전에서 입상하거나 협회 추천을 받으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인들 중에는 협회로부터 미술대전 주최사 이사장의 가족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번호를 전달 받고 발전기금 500만원씩을 낼 것을 요구받은 경

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통령상 위조·거래를 주도한 브로커를 추적 중이며, 미술대전 주최사 이사장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3-4개월 전 숨졌다는 설도 제기돼 경찰이 진위를 파악 중이다.

또 경찰은 예술인들과 브로커 간 실제로 금전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해 공문서 위조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예술인들 중 일부가 위조된 상훈 기록을 바탕으로 목포시에 작품을 판매하는 등 혜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는 2017-2022년 5년 동안 위조 대통령상 소지 의혹을 받는 예술인의 작품 6점을 구입해 청사 내에 비치했다. 목포시는 해마다 4000여만원의 들여 지역 예술인 작품을 구입 및 전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상 수상 기록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더 쉽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를 들어 향후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더위 탈출엔 스케이트가 최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1일 오전 광주시 서구 염주빙상장을 찾아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염수 투기 반대" 광주 북구민 단식·삭발투쟁

광주시 북구 주민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투기를 반대하는 공동행동에 나선다.

북구 주민들로 구성된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추진위)는 2일 오후 2시 북구청 앞 광장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북구소녀상과 함께 기억을 지키

다! 미래를 지키다! 함께 지키다!'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공동행동은 주민들의 릴레이 단식과 피켓팅 등으로 진행된다. 릴레이 단식은 북구청 광장에 있는 소녀상 옆에 단식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주민들의 공동행동에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들도

24시간 천막에서 머물며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천막에서 한끼·하루 이상의 단식을 하며 SNS에 #북구소녀상 #핵오염수 투기반대 등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물을 올리면 된다.

단식이 진행되는 기간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소녀상 앞에서 릴레이 피켓팅도 진행된다.

선포식이 열리는 2일에는 삭발식도 진행된다. 정달성·정재성 북구의원, 박남기 맨발걷기운동본부 단장은 이날 삭발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반대 결의를 다진다.

/김다인 기자 kdi@

사건 인사이트

잠들면 돌로 허벅지 찍기 '죽음의 별칙'

여수서 게임머니 갈등에 3주 동안 서로 때려 1명 사망·1명 중태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최근 발생한 30대 남성 사망사건의 원인은 친구끼리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는 별칙게임 때문으로 확인됐다.

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여수시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숨진 A(31)씨의 부검결과 사망 원인은 둔기로 맞은 허벅지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30)씨가 사고 당일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A씨는 조수석에서 숨진채, B씨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다.

차량내 블랙박스 기록이 지난달 17일 이후 없어 난감해 하던 경찰은 B씨가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아 진술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게 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여수와 순천에 거주하면서 지난 2020년 온라인 게임에서 만났다. 이들은 각각 홀로 살며 일용직 노동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3년간 친하게 지냈다.

게임을 하면서 게임머니와 현금까지 빌려주던 이들은 종종 다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빌려준 게임머니와 현금 관련 갈등을 끝내기 하고 3주간 같이 차를 타고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일명 '갈장 논쟁'을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말 싸움을 하다 상대방이 잠들면 뺨을 때리며 깨우기 시작한 이들은 결국 허벅지를 돌맹이로 내리치는 별칙까지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선배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서로 잠을 재우지 않은 채 말싸움을 이어가던 이들은 반복해서 돌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때렸다.

돌로 맞은 허벅지에는 피부 과다상이 일어났고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등에 상처가 나기도 했다. 이들 옷에는 돌로 때리면서 묻은 흙이 발견됐지만, 폭행에 사용된 돌맹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각자 차량에 탑승한 모습도 확인했다. 운전을 하던 B씨가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자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숨을 거뒀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의 채무관계 파악을 위해 계좌 추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전국민의 경제담당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